

선거법에 '어느 한 성이 80%이상 차지하지 못한다' 조항 신설 제안



▲10개로 구성된 <정치관련법 개정을 위한 여성단체모임>이 기자회견을 갖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성계가 여성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정치관련법개정청원서>를 내놓은 한편 국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지는 안을 제시하고 국회의장 면담 등을 통한 청원 배경 설명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여성단체는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선거구제 채택 및 모든 선출직에 '어느 한 성이 80%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조항 신설, 정당공천할당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청원에 참여한 단체는 <여성단체연합> <여성정치연맹> <여성유권자연맹> 외에 <대한간호정우

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전문직업여성 한국연맹> <국제승공연합>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등 10개단체로 예년과 달리 여러 직능단체가 참여.

2~3명 뽑는 중선거구제안 전국구 배분은 득표율로

여성계 개정안의 초점은 정치적 대표성의 확보라는 맥락에서 여성이 과소대표되는 현실의 타개책의 마련과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 돈 안 드는 정치를 위한 제안이다. 모든 선출직에 '어느 한 성이 80%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조항 신설과 직능대표를 골고루 진출시킬 수 있는 중선거구제와 전국구를 병행하되 1인2표제

도입 제안 등이 주목을 끈다. 선거법에 '한 성이 80%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못박고 있는 나라로는 79년에 법을 개정한 프랑스가 있다.

중선거구제와 전국구를 병행한 '1인2표제'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단 1명만 당선됨으로써 낙선후보들의 표가 '죽은 표'가 되어 국민의사가 심히 왜곡되는 단점을 보완하자는 것. 선거구를 좀 더 확대해 1선거구에서 2~3인을 뽑되 지역구와 전국구 비율을 2:1로 나눠 전국구 의석은 현재의 의석비율에 의한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라 득표율에 의해 배분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를 찍고 아울러 전국구 명부를 보고 정당에도 1표를 찍는 이른바 1인2표제로 전국구 본래 취지와 기존여야 대결에서 신진세력 충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여성계의 주장이다.

또 여성계는 현행 공천관행과 관련, "공천이 계보와 공천권을 가진 몇사람간의 정치적 협상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이번 개정에서는 후보선정을 위한 비밀투표나 경선선출후 중양당의 인준을 받는 절충주의와 함께 여성을 일정비율 공천하는 정당공천할당제 도입도 잠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안에 '여성특별위원회 신설'을 위한 청원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여성계는 "행정부나 정당이 여성관련업무를 효율화하는 조직을 정비하는 마당에 국회에 여성관련업무 전담조직이 전혀 없다"며 여성위원을 포함, 여성문제에 관심을 지닌 의원들이 관련입법을 기초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이들을 지원할 채널로서 '국회내 여성특위 신설'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제안 설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경오 회장 역시 개별적으로 여성특위 설치를 건의하기 위해 지난 5일 민주당 김덕규 사무총장을 면담한데 이어 이만섭국회의장, 민자당 고위당직자들을 면담.

정치관련법개정안을 내놓은 곳은 현재 시민단체안과 여성계안을 포함, 민자·민주당안으로 11월중순 이후에 본격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우정 의원 및 여성당직자들로 구성된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29일 <여성의회진출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진출을 위한 '규정조항'없이는 참된 개혁입법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안에 비례대표의석의 20%를 여성에게 담당하는 여성비례대표할당제 실시를 강력 촉구. 여성위는 "결코 할당제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런 장치없이 여성위원비율이 증가한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